

해외주식 매수·매도 최고치 기록

# 밖으로 눈돌린 동학개미... 테슬라·애플 등 90兆 샀다

2분기 외화증권 결제 90.8조 기록  
외화주식 보관잔액 27.1조 집계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해외 눈길  
일각선 변동성 확대 주의 지적

지난달 해외주식 거래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758억6000만달러(약 90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올 1분기 665억8000만달러 보다 58.3%나 늘었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주식 보관잔액은 올해 상반기 227억5000만달러(약 27조 1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하반기 기준 144억5000만달러(약 17조 2000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외화주식 보관잔액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의 총 가치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187.93)보다 23.76포인트(1.09%) 내린 2164.17에 장을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59.90)보다 0.74포인트(0.10%) 내린 759.16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8.6원)보다 0.1원 내린 1195.7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투자자들이 국내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018조6000억원으

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넘치는 유동성이 투자와 소비보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 1위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대형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해외

(주요국 외화주식 예탁결제 순위)

순위	국가	종목명	매수결제
1	미국	테슬라 모터스	632,784,469
2	미국	애플	421,807,132
3	미국	보잉	379,895,335
4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373,411,986
5	미국	아마존	206,638,200

7월 7일 기준, 단위: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대형주로 '테슬라'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상반기 순매수 규모만 4억 7000만달러(약 5600억원)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2240억달러(약 270조원)로 폭스바겐을 넘어 기존 전세계 자동차 시총 1위였던 일본 토요타(약 210조원)를 앞질렀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년새 500% 상승했다. 지난해 7월 230달러(약 27만원)에 살 수 있던 테슬라 주식은 지금 현재 1371.58달러(약 15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매수상위종목은 애플, 보잉, 마

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순이다.

한편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가가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거의 회복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실적이 비대면(언택트)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영한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간 줄다리기가 팽배한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종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고확실카드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높아질수록 미국 대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갈등 고조처럼 경기회복 속도를 저해할 수 있는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감은 높은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공적 마스크, 12일부터 '시장공급' 체계 전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현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오는 12일부터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노사분규 장기화시 일자리 매년 5만개 감소

### 파이터치 연구원 보고서

자동화 촉진으로 기계대체 가능성

노사분규가 길어지면 자동화가 촉진돼 일자리가 매년 약 5만개씩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계에서 자동화가 가장 잘 된 우리나라 특성상 사람을 기계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내놓은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 노사협력지수는 4.8점이다. 대한민국은 평균보다 1.4점 낮은 3.4점을 기록했다. 숫자가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마지현 연구원은 "노사분규가 1% 심

화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며 "실증분석결과를 대한민국 사례에 적용하면 매년 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노사협력지수가 낮은 것은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OECD국가의 자동화 지표(근로자 1만명당)는 대한민국이 458대로 가장 높았다. OECD국가 평균은 114대로 한국이 평균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마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노사분규를 제재하는 강도가 낮다"며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회사에도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기재부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할 것"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現 금융세제 방식 형평성 지적  
"금융 세제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

기획재정부가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현재 금융 세제 방식에 대해선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금융 세제를 손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확정에 앞서 여론 수렴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과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발표자로 나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위해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겠다"고 했다. 모든 소득(양도차익·배당금 등)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 세제에 대해선 세 가지 지적했다. ▲상장 주식·채권·장외 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고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과도하며 ▲고소득층일수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펀드 과세 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 주식 양도 손익을 포함해 불완전·손실 과세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과장은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 대상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호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우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뉴시스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 발생한 펀드의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관리돼 손익통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펀드 발생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배당으로 분배를 강제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의 과세 대상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투자자 중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둔 이유에 대해 김과장은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확립된 이론은 없고 일부 선진

국은 모든 양도차익을 다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라 일단 그 정도로 제시했다"고 답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투자자 중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 20~25%에 대해선 "단순한 2단계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은 자본소득세 10~20%의 세율을, 미국은 15~20%를, 일본은 20%를,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25%·30%를 매기고 있다.

기재부는 공청회와 금융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오는 9월 초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엔 금융사 원천 징수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하반기 개정 세법 중 필요 사항 보완 입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vin@